

한반도

남북대화한다고

박근혜를 도와야 하는가 ▶ 2면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임금도 깎고
비정규직도 늘리겠다?

▶ 4면

철도·가스

민영화 저지
파업이 필요하다

▶ 8~9면

경제 위기

아베노믹스와
한국 경제

▶ 3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인식
인쇄인_ (주)아이에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호)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1772005 821003 24

Left21.com

제106호 | 2013년 6월 10일 ~ 6월 2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재벌 파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1백35조 원 중 국방 예산은 애초 공약보다 대폭 늘어난 반면(17조 4천억 원), 복지 관련 재정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그나마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대책이 없다. 2008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줄곧 2퍼센트 후반대인데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4퍼센트로 전제하고 예산을 짰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사업 확대, 즉 민영화로 세출을 절감하겠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깊어가는 경제 위기와 관련 깊다.

최근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며 한국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반인 자본가들도 박근혜를 압박하고 있다.

전경련은 ‘중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을 들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을 협박하고 나섰다. 자기들의 특권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가 ‘재벌 파주기’와 노동자 공격을 밀어붙이려면 이를 뒷받침할 동력이 필요하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60퍼센트를 넘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발표는 마치 그런 동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우파들의 결집과 대안 부재의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은 11퍼센트인데, 이렇다한 자리 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박근혜·비민주당의 공백을 흡수하려는 안철수의 기회주의적 행보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위기 심화를 피하곤 하지만, 모순과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호민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조사가 계속되면서 온갖 부패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도 폭로됐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구속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가 힘겨루기를 하며 국가기구 내부에서 균열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악재와 균열 탓에 취임 1백 일 동안 막상 박근혜가 제대로 추진한 일을 꼽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취임 1백 일 공식 행사도 잡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18퍼센트다. 역대 최저 수치다. 오죽하면 전통적으로 여당과 정부 간에 이뤄지던 당정협의를 민주당과도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도 민주노총이 빠진 데다가 한국노총 내 금융노조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반의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도 시사적이다. 반해버스가 밀양으로 내려가는 등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면서 박근혜는 일단 꼬리를 내려야 했다.

▶ 3면으로 이어짐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누구의 말일까요?

“국정원을 이렇게 작은 건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오래 수사해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 ... [검찰이] 이전 ‘좌파의 주구’라는 말이 나올 지경”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불편한 조갑제

“[제주 희생자 추념일로] 4월 3일은 안 된다. ... 4월 3일은 레니가 망명 중 1917년 2월 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

전 제주경찰서장 김영중

“정대세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 ... 축구협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대세를 추방하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든지 해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변희재

“중소기업 사장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이런 꼴 당하려고 우리가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지지했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가 전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감

“원전이 뭐가 큰 사고를 낼 임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 ...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 두렵다.”

〈조선일보〉도 걱정하는 핵폭탄’ 발전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외과수술식 공격이 지금처럼 긴박하게 요구된 적이 없다.”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

“그럼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

5·18 항쟁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채널A의 뻔뻔한 답변

“뉴욕에서도 경찰을 동원해 ‘점거하라’ 시위대를 공원에서 내쫓지 않았냐.”

미국의 시위진압 우려에 대한 터키 외무장관의 답변. 잘들 본다.

“폭도 놈의 새끼들이 끼어 갖고”

제주 4·3 항쟁에 대해 제주도지사 우근민, 알고 보니 ‘일베충

“일본은 세계 제일의 인권 선진국. ... [참석자들이 폭소하자] 웃지 마세요. 입 다물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인권 담당 대사 우에다 히데아키

남북 회담 추진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김영익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5월 말에도 남북 정부 들이 “괴뢰 대통령”, “파렴치한” 등 원색적 비난을 주고받았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얻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한다. 〈한겨레〉조차 박근혜의 ‘대화문 열어 놓은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부채질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를 적극 지지했고, 미국과의 전쟁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 ‘지휘체력까지 응징하라’는 말로 긴장을 더 높인 것도 박근혜다.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진 계기도 바로 국방장관 김관진이 “[개성공단 인질 억류]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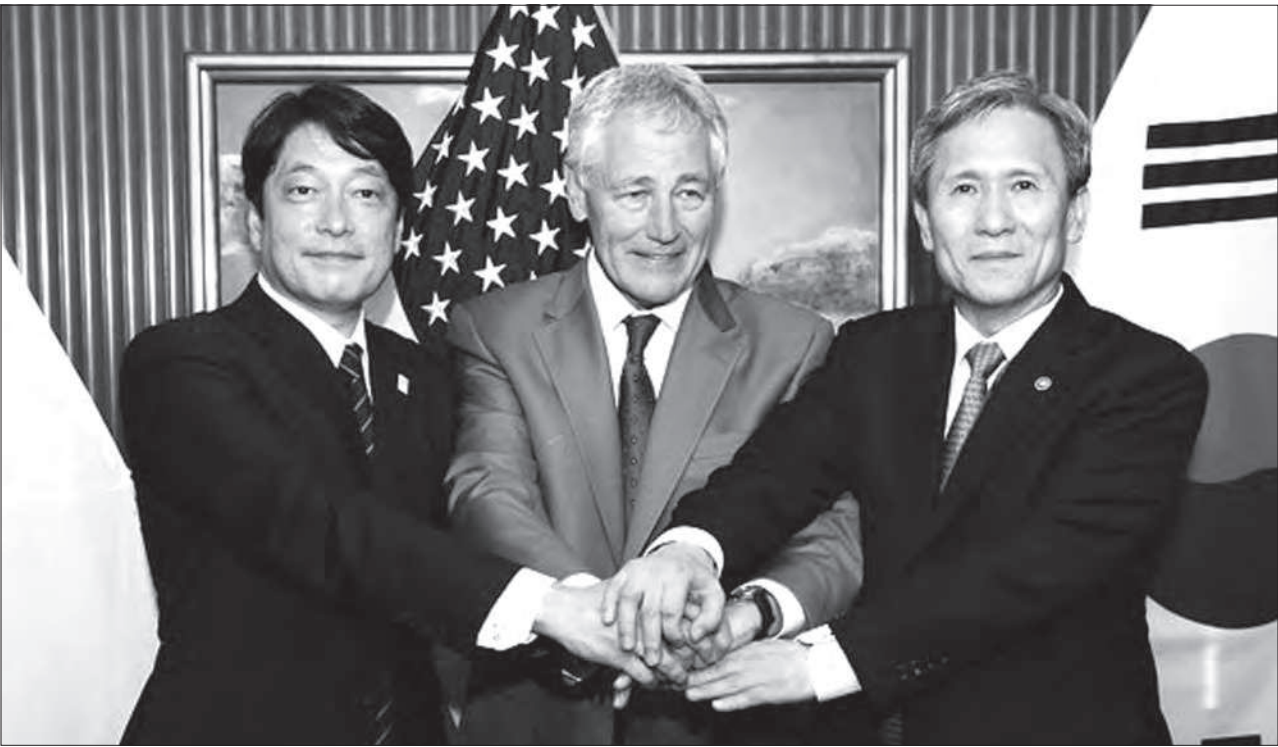
최근의 분위기 변화는 이런 대북 강경책이 낳은 성과라고 결코 볼 수 없다.

현 국면은 미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을 거세게 몰아붙이다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찾아온 일시적 유화 국면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핵 실험을 빌미로 잇단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이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핵 선제 공격연습까지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보면서 북한 지배자들은 큰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협박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오바마가 지난 4년 동안 ‘아시아로의 귀환’을 말해 왔지만, 여전히 중동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다. 당장 시리아를 놓고 벌이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



유엔은 선출되지

평화를 가져 올 수 없는 자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대북 압박 공조에 합의했다.

전이 발등의 불이다. 아랍혁명의 여파로 미국의 동맹국 터키에서도 저항이 폭발하는 등,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 온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제하기는커녕 더 강화시켜 왔다.

이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위기를 ‘관리’하며 시간을 벌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도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당장 또 하나의 전쟁을 벌일 여력이나 생각은 없는 상황이다.

일시적

무엇보다 미국은 지난 몇 달간의 ‘근육질 과시’를 통해 이미 몇 가지를 쟁겼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상당한 합의를 이뤘고, 예정보다 일찍 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점은, 오바마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를 여지를 줬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재개 시도가 나올 수 있었다.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는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월 7일~8일에 열리는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남북 회담이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근본 요인들이 여전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한반도 긴장의 배경인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두 열강들이 서로 갈등할 만한 잠재적 적대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예컨대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아시아 귀환)’ 정책을 위협으로 느끼며, 미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꼽은 남·동중국해의 제해권을 자신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갈등 요소들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이든 양자 회담이든,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될지도 좀더 두고 봐야 한다. 오바마는 북한에 비핵화 등 ‘선 양보’를 요구하는데, 북한 지배자들한테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우여곡절 끝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관련국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진척이 더딜 수 있다.

그동안의 북·미 대화는 미국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오히려 새로운 위기로 이어지곤 했다.

따라서 남북 회담의 앞날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남한 지배자들은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왔다.

중·미 갈등이 다시 불거지거나 북·미 관계가 또 나빠지면, 남북 회담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북 회담 자체에도 쉽게 풀기 어려운 난관들이 수두룩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다가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찾아 오는 건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다. 당장 부시 행정부 때도 우리는 이런 변화를 여러 차례 봤다.

지난 2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위기와 대화 국면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긴장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 계속됐다.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국가 간 갈등은 이를 더 위험스런 방향으로 몰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미국 제국주의와 동맹국들에 맞서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운동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지난 60년 동안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 관계를 내부 저항자들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무기로 이용했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는 독재 시절 민주주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핵심 구실이였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 관계 해결만이 아니라 대화 상황도 노동자 운동 통제에 이용했다.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유화 분위기 속에 유신헌법을 밀어붙이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롯데호텔·사회보험 노

동자들의 파업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노동자 투쟁은 남북 화해 무드를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박근혜도 이번 남북 회담을 국내에서 계속돼 온 위기와 악재를 덮는 데 이용하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바쁘다.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정서를 이용해 정권에 맞선 저항이나 노동자 투쟁이 무더지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단지 개별 작업장이나 노사관계로만 시야를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긴장 구조 등 더 넓은 정치적 문

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노동운동은 이런 상황에 ‘민족 화해’를 앞세워 노동자 투쟁을 그것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압도 다수인 노동 대중을 배제하는 ‘민족’이란 공허하며, 노동

자 투쟁의 발전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처럼 ‘남북 대화하겠다는 박근혜를 도와 주자’는 관점은 위험하다.

따라서 박근혜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지속해야 한다.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6월 24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대점(오아시스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6월 25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6월 26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 가판은 6월 27일)
부산 서면 주디스테이트백화점 앞 18:30~19:30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상사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 다음 호(107호)부터 일부 대학 공개판매는 쉽니다.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 **망시즘 2013**에서
▶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동아시아 불안정
▶ 냉전 해체 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핵
▶ 정전협정 60년 :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망시즘
MARXISM 2013
▶ 더 많은 정보는 9면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노조 파괴 홍준표 규탄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조례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6월 18일(화)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6월 22일(토) 오후 3시 서울역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오후 1시 단위별 사전 집회

경제 위기에 노동자 공격의 발톱 세우는 박근혜

▶ 1면에서 이어짐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주춤거릴 때를 이용해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투쟁과 민영화 반대 투쟁 등 노동자 투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 투쟁들이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우리 내의 분열이 보이면 그 틈을 더욱 벌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투쟁들에서 노조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단결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

운동의 힘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개약진하기보다는 투쟁을 한 데 모아 전진하는 것이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6월부터 예고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건설노동자 파업 등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벌어진다면 정부로서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은 부문주의를 벗어나 작업장을 뛰어 넘는 정치적 관점으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남북 회담 등의 문제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갇혀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 분담 없이”는 경제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중앙일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 싸우는 조직 노동자들을 나머지 더 열악한 사람들과 대립시키려 한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계급은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말처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으로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부의 폭력에 맞서는 터키 민중과 연대해 총파업에 나선 터키 노동운동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준다.



김지윤 서서히 시작된 투쟁을 더 뜨겁게 재벌 파주기 노동자 쟁취싸기를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단결·집중된 투쟁이 필요하다. 4월 15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학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정선영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키웠지만 막상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장기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는 부작용(장기국채 가격 하락)이 먼저 나타났다.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의 2백40퍼센트에 달해서 지금도 세수의 25퍼센트를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데 말이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발 위기가 세계경제를 추락시켜 “아베겇돈”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 언론들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한국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더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잘 되도 문제, 못 되도 문제”(금융위원장 신제윤)라는 것이다.

이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세계 자본주의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자본가들의 처지를 보여 준다.

사실 ‘엔저’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줄긴 했지만 일본의 1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10.5퍼센트로 더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에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약간씩 줄어들었다.

엔저 때문에 일본 수출이 늘면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엔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낳는 진정한 원인은 여전히 부진한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있다.

악발 떨어진 대책들

5월 들어 미국, 중국, 독일 등의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며 세계경제가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이 12.2퍼센트를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 촉진 정책도 힘을 못쓰고 있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출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의 모순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하락해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5백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4퍼센트가 줄고 당기순이익은 7.8퍼센트가 줄었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급감했다.

2012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은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갑을 잠그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1천4백 퍼센트라는 사상 최대의 현금 유보율을 기록하면서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사상 최대 부동산 부양책과, 역대 둘째 규모의 슈퍼 추경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별로인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부양책은 두 달여 만에 악발이 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와 은행 등의 부실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더욱더 ‘재벌 퍼주기’로 나가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해 기업에 특혜를 주고, 통상임금 등을 공격하며 시간제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다.

엔저에 대한 위기 의식을 부추긴 것도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엔저에 맞서 수출경쟁력을 지키려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특근거부 투쟁을 할 때 ‘엔저에 웬 파업’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위기의 뿌리가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체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주장 속에 아베 지지율이 70퍼센트로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물가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는 아베 정부에 맞서 6만여 명이 국회를 포위하고 시위를 벌였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것은 이것이다.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위기는 “국가 부채 위기”로 전이됐고, 이를 구실 삼아 각국 지배자들은 긴축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국가 개입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사들이며 시중에 돈을 풀어 온 것이다.

그동안 이 돈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다.

문제는 첫째, 이런 양적완화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낮은 이자율에 중독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가 몇 달 뒤부터 양적완화를 줄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주식이 급락하고 일본 경제도 휘청였다.

둘째, 양적완화가 실물경제 회복을 이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실업자가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회복 속도는 너무나 느리다. 유럽 경제는 수축하고 있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는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이 고장 난 체제를 고쳐쓰는 대안에 머물 이유가 없다.

맑시즘 2013에서

▶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 무엇이 위기를 낳는가

▶ 김수형 교수가 말하는 자본주의 이후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

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맑시즘
MARXISM 2013

▶ 더 많은 정보는 9면에.

폴라주 98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6월 전격 개봉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의 명령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성지현·김문성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는 강성 우파임에도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고용률 70퍼센트’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벌써 드러난 셈이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속에서 한국 경제 여건도 갈수록 악화하는 것과 관련 깊다. 이 속에서 이 나라 기업주들은 탐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기업주들은 별것도 아닌 ‘경제민주화’ 법안들조차 반대하며 “생산기지 이전”까지 협박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재벌 퍼주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서 기업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제 같은 저질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수치를 높인다는 발상이 나온다.

박근혜 일자리 대책의 특징은 첫째,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공격이다.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시켰다. 이것은 통상임금을 때먹는 것을 넘어서, 이참에 아예 기업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다.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은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자들 내 분열을 낳기 때문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은 초과노동수당 없이 주당 52시간까지 노동자들을 부려 먹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은 껌



“알바천국”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자?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데기가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의 일자리 대책은 미조직·비정규직들의 처지도 더 후퇴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인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사내하도급법은 “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불려 온 대표적 반노동 정책이다. 이 법은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정몽구의 숨통을 열어 줄 것이다.

나아가 ‘장년층의 일자리 수요를 위해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직업 소개 업체가 수수료를 떼어먹으며 고령의 노동자들을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협약’에서 정부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당선 이후 1백 일 동안 ‘비정규직과 취약 근로자’들을 앞장서

짓밟아 온 당사자다. 쌍용차 해고자들을 철거하고 꽃을 심었고, 2백 일 넘게 철탑에 올라가서 단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런 박근혜와 손잡고 ‘대타협’을 하면서 다시 배신적 한계를 드러냈다. 심지어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 된 채 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위한 박근혜의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헛소리

박근혜의 ‘로드맵’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약 40퍼센트가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질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박근혜 말처럼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좋은 일자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자리”라고 규정한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2백만 명 가량이 이 나라의 시간제 일자리의 현실은 처참하다. 임금은 정규직의 22퍼센트, 비정규직 평균 임금에도 반밖에 안 되고 4대 보험 적용률은 바닥이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취업 자체외한 15세 이상 인구’ 중 14.2퍼센트).

박근혜 말처럼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꾼”다고 이것이 달라질 턱이 없다. 박근혜는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공무원’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과 정원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이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만 낳을 것이다. 이것은 사기업에서 저임금 시간제 양산만 “선도”할 것이다.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납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을 내세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전체 고용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제 일자리다.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1970년대부터 늘어났다. 당시 시작된 장기적 경제 침체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네덜란드 기업주들은 노조 지도자들에게 당장 해고를 늘리지 않는 대신 임금 인상 자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갰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고, 노동계급 내부에서 고통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그나마 당시 네덜란드는 임금 차별이 적고 복지제도가 탄탄했기에 이런 타협이 유지됐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위기 때는 다급해진 기업주들이 먼저 ‘합의주의’를 깨며 공격을 강화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는 지금 정규직 노동조건 공격과 비정규직 확대를 동시에 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금융노조, 공공연맹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개무시하는 이 나라의 지배자들이 노사정 ‘타협’을 진지하게 성사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세계경제 위기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가 추구하는 길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계의 지속과 악화만을 낳을 것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배제와 탄압이 강해질 것이다.

네덜란드 모델에서 노동운동이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노조운동이 노동 유연화를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발목 잡힌 결과, 노동계급 단결과 투쟁력만 약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네덜란드의 복지국가가는 많이 후퇴했다.

노동운동은 ‘유연안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록금, 집값 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있을 때 벌자’고 나서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노조와 사내복지라도 있지만, 미조직 비정규

직 노동자들은 그것도 없다. 그래서 대다수가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과 무권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된다. 게다가 많은 청년, 여성, 노인들은 이런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실업 상태로 내몰리곤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첫째, 임금 감소와 노동조건 후퇴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은 일을 못 시키도록 규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얼마 전 주 48시간으로만 노동시간을 규제해도 1백14만 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처럼 임금 삭감과 노동조

건 후퇴를 수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선 안 된다. 임금이 삭감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특근과 ‘투잡’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자리를 늘릴 수도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없다.

상시 업무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 고정급 비중을 늘리도록 임금 구조도 바꿔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형편없는 사회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로로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끝내야 한다. 정

규직으로 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게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재생 에너지 생산에 국가 지출을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고장 난 핵발전소의 가동도, 핵발전을 위해 밀양 어르신들을 짓밟는 일도 정말 보기 싫다. 최근 파산 위기에 내몰린 조선소들을 풍력발전 생산기지로 전환하면, 핵발전을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안을 위한 재원은 재벌과 부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경제 위기인데도 2012년 3분기 현재 상장회사 1천 6백44곳의 내부유보금은 8백32조 원이

나 된다. 최근 조세도피처를 통해 빼돌려진 한국 자금이 8백조 원이 넘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런 돈들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이를 강제하려면 부문과 조건의 차이를 넘어선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노동계급 내부의 소득 격차가 가장 적었던 때는 바로 노동운동이 강력했던 1987년부터 1996년 시기였다.

따라서 조직 노동운동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저들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조직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단결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부문주의를 넘어서 이런 단결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총력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단결 투쟁으로 호봉제·교육공무직 쟁취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에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집회, 노조 지도부의 삭발과 농성, 릴레이 단식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들이 힘을 집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염원인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데 6월이 중요한 고비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날 발표될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 대책’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투쟁의 성과다. 지난해 파업 이후 몸집과 힘을 키워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교섭을 거부하던 교육부와 보수 교육감들도 이제는 감히 그럴 수 없다.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고, 새누리당조차 교육감 직고용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제출할 정도다. 이제 교육감 직고용은 “대세”가 됐다.

학교장과 눈도 마주치기 힘들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에게 고용의 책임을 묻고 교섭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염원

노동자들은 “진정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이 관철돼야 한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염원을 대변하는 요구다.

그런데 교육부는 ‘호봉제는 도입할 수 있다’면서 기껏해야 임금을 1년에 1만 원씩 올리는 정도를 말한다. 게다가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을 늘리겠다고며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온전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지난해 투쟁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령’ 취급받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으로 학교를 뒤흔들면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강력하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노조가 하나로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투쟁의 파급력도 커졌다.

그런 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6월 1일 집회를 따로 열고, 노조 지도부 농성도 따로 하는 상황은 자못 걱정스럽다.

이것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함께 투쟁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차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더는 이 문제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투쟁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를 핑계를 대아서 웃을 자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라. 바로 우리를 다시 ‘유령’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자들과 박근혜 정부다. 이들은 노조들 사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만 매일 기도할 것이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노조가 여러 개로 분열된 상황 자체에 있다. 노동자들이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려면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노조 통합이 어렵다 하더라도 투쟁할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 공동으로 투쟁하며 단결을 쌓아갈 때 장차 하나의 노조로 갈 수 있는 길도 닦을 수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6월 총력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한 저력을 펼쳐 보이자.

조명지



‘유령’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공동 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2012년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첫 공동 파업 집회.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려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했던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정말 정당하고 당연한 전제, 언론 왜곡 보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서게 됐죠.

파업으로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가 다들 관심이 높았어요. 때마다 전 교조에서 계기수업[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가르치는 수업]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게 됐어요. 비조합원들도 우리의 연대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과 지지가 컸어요. 계기교육 자료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였던 거죠.

교실마다 자료를 게시하고, 메신저로 전체 교원들에게 계기수업을 하자고 제

안했어요. 뜻 있는 교사들이 계기수업에 나섰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업 때 학생들은 정말 당연한 파업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연대 활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학생들의 의식이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 것이기도 해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이고, [노동자들을] 회유하거나 외부 단체에 도시락을 맞추는 것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교사들에게 알렸죠. 전교조 분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어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에 다녀와서 연대해 준 교사들에게 음료



수를 전달해 줬을 때, 구호로만 외치던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됐어요. 내 자신이 성장하는 큰 경험 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연대할 겁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살피고, 생각을 충분히 들어 보는 자리가 필요해요. 식사라도 함께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연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해요. 원종고 같은 사례를 모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인터뷰·정리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에 전국의 6천 영전강은 모두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62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학사 말만 믿고 영전강이 됐습니다. ‘4년 한시’니, ‘영전강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직종’이라는 시행령 따위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 본 적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약국에서 연고를 하나 사도 주의 사항과 부작용을 설명해 줍니다. 합격 후 연수 가서 장학관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뭔지 모르겠지만 꿈수가 있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대전에서 만난 영전강 4명이 씨앗이 돼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계약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그저 ‘에스맨’이 돼 숨죽이며 참아야 했습니다.

일할 때는 교사라고 치켜세우며 수업도 일도 많이 시키더니, 상여금이나 각종

혜택을 받을 때는 비정규직 취급하며 놀여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70점 이하면 해고라는 어이없는 교원평가에 시달리면서도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학교 가서 공개 채용에 다시 응시합니다.

그나마 잘 봐줘서 같은 학교에서 신규 채용에 재응시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막

이게 무슨 개 풀 뜯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직종이 3차에 걸쳐 시험 보고 채용됐는데, 해마다 평가받는 것도 부족해서 4년마다 또다시 채용 시험 본답니까.

교육부는 ‘8년 연장안’이니 뭐니 떠들며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위해 애쓰는 척 연막을 치더니, 이제야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찮은 고스톱판에도 “낙장불입”이라

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전강 6천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8년 연장안이라는 패를 꺼내 보여 주고 해 줄 것처럼 놀리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전강 제도 만들 때는 거창하게 떠들어 대더니 임기 말에 우리를 내팽개치고 줄행랑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니 관심도 없답니다.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 줄 것처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몽땅 정규직화해 줄 것처럼 굴더니 지금은 비정규직 쓸어 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하며, 대통령 시행령 때문에 영전강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고堂堂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만드는 데 그런 노력을 쏟으셨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법대로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해 주면 될 텐데, 굳이 악의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영전강만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규정해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셨으니 지옥 가는 예약권 맡아 놓으신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당신들 눈에는 피눈물 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교육부는 악의적인 시행령 42조 2항 [학교장 계약 조항]과 5항[한 학교 4년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당장 영전강 6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영전강이 잡초처럼 보여 짓밟고 있지만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윽한 향기 품고 조용히 피어나는, 아름답지만 강한 한 폭의 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전강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미친 듯이 투쟁!

정리 김영익

현대차 임단협

임금은 올리고 일은 줄이자

허수영·김기선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은 “악화일로의 현대차, 과도하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이라며 노조 비난을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맑그릇만 행기려는 강성노조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이런 이윤 잔치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지난해 현대차 평균 노동시간은 2천4백44시간이다.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한 노동자도 1만 7천6백63명이다. 한국 제조업 평균인 2천1백 시간보다 적어도 한 달 반을 더 일한 셈이다.

이는 턱없이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려고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3.7퍼센트에 불과하다. 나머지 40퍼센트 이상이 연장근무, 특근 등 수당이며 그 나머지가 상여금과 성과급이다.

밤샘노동이 폐지됐지만,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그 대가로 생산량을 맞춰 주겠다고 합의해 노동강도는 도리어 높아졌다. 노동시간도 여전히 길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13주 동안 주말특근 거부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주6일 근무’ 고착화와 강화된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 투쟁은 마무리됐지만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주말특근 거부 투쟁 중간 평가는 본지 104호를 보시오.)**

올해는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잘 조직된 현대차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전진을 이룬다면, ‘박근혜식 노동시간 단축’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최근에 불거진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기본급을 대폭 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본급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특별교섭이 재개되면 사측은 정규직 임단협과 비정규직 문제를 분리시키려 힘을 쏟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해서 수혜를 얻을 건 사측 뿐이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는 통상임금 소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투쟁을 돌아보면, ‘무쟁의 3년’을 깨고 살아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노조 지도부는 투쟁을 철저하게 부분과업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29일 1공장 노동자들이 지도부의 특근 합의에 반대해 조업을 거부하며 투쟁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 투쟁에서 드러난 불만은 해결된 것 없이 임단협으로 유예됐다. 아쉬움은 있지만, 주말 특근 거부 투쟁은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 준 사례다. 지도부가 싸울 때는 함께 싸우되, 투쟁을 하지 않을 때는 독립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라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4월 29일 투쟁 건으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 및 정의행위”를 명목으로 1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게다가 정규직 활동가 두 명을 고소·고발했다.

4월 29일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코드”(무단결근)를 적용해 임금을 깎는 비열한 짓도 하고 있다.

탄압으로 현대차 사측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특근 거부 투쟁에 적극 나선 동지들을 탄압함으로써, 이 투쟁이 빚어낸 생산 차질에 복수를 하고, 임단협을 앞두고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징계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 활동가들도 1공장 노동자 탄압에 맞서 적극 나서야 한다.



“함께 이기자” 정규직의 주말 특근 거부 투쟁 때 비정규직지회도 함께 일을 멈춰 파업의 위력이 배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살 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될 듯하다. 현대차 사측은 “환영”한다는 위선을 뽐내면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천의봉·최병승 동지의 철탑 농성이 무려 2백 일을 훌쩍 넘겼고 양재동 본사 앞 노숙 농성이 두 달을 향해 가는데도, 외면과 폭력뿐인 사측이야말로 정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5개월 만에 특별교섭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특별교섭 무산 이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시 특별교섭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양보를 종용하고 급속노조 지도부가 비민주적으로 잠정합의를 할지도 모른다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우려와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반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지부와 급속노조 지도부에 항의하는 정당한 연좌시위를 했다.

교섭 무산 후 사측은 미뤄 오던 신규채용을 강행했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 결정은 불가피했고, 쉽지 않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투쟁이 필요했다. 아쉽게도 투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어려운 조건에서 고심 어린 결정이었겠지만, 특별교섭을 무산시킨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지키려 했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에서 일부 후퇴했다.

절박

최근 울산 비정규직지회 쟁대위는 ‘조합원은 협상 타결 즉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정도 했다. 조합원이라도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조합원 이탈을 막으려는 심정이었겠지만, 조합원들만을 위한 협소한 투쟁으로 비쳐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가 물러선다고 저들이 물러서는 건 아니다. 투쟁의 결과에 따라 교섭의 내용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후퇴 압박

에 맞서 전진하려면 작업장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와, ‘갑’에 대한 반감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와 연대를 확보할 수 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투쟁해 승리할 수 있었다.

게다가 13주 동안 주말특근 거부 투쟁이 벌어졌고, 그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작업장에서 투쟁을 벌이고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연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에 벌어진 대체인력 저지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가능성과 효과를 분명히 보여 줬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사내하도급법에 맞서는 중요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공장 바깥에서 정치적 연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쌍용차 투쟁은 돈이나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거를 무시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이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때문에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폭탄과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레프트21〉박설 기자는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설 기자는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6월 1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설 기자는 판사의 몇 차례 제지에도 모두진술에서 꺾끗하게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다음은 박설 기자의 모두 진술문 전문이다.

저는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이 너무 치졸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자, 도로 교통 방해를 걸었습니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탄압으로 우리를 멈춰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당일 집회에서 설사 일부 교통 혼잡이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쌍용차

비극을 부른 당사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제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2009년 쌍용차 파업이 한창일 때 공장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노동자·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만난 한 노동자도 그랬습니다. 그의 바람은 정말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쫓겨날 수는 없다, 생존권을 지켜야겠다, 그것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보족을 낀 장애인이었는 데도, 그 뜨거웠던 여름, 공장 안에서 휴지로 다리에 찬 고름을 닦아내며 동료들과 함께 거의 마지막까지 투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광기 어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공장 밖으로 쫓겨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등진 날, 그의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오열하던 그분을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가 이런데, 그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무려 24명입니다. 24명의 소중한 목숨과 그 가족·친구 들이 흘린 피눈물이 어떤 것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직도 복직하지 못한 희망퇴직자, 해고자 2천5백 명이 느낄 벅장 끝 절망,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2009년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한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부는 2010년에 쌍용차를 마힌드라에 팔아넘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힌드라는 2009년의 악몽을 재현할 먹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노동자들이 연이은 부도·먹튀·매각의 소용돌이에 희생돼야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쌍용차를 공기 입찰해서 일자리를 보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대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조차 내팽개치고, 대한문 농성장까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취임 1백 일입니다. 정부는 당선하자마자 복지공약 먹튀하고 온갖 비리와 성희롱의 오물을 토해 내더니, 그동안 떼먹은 통상임금도 못 주겠다, 고작 시간제 알바 자리나 늘리겠다며

노동자·민중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무죄인 첫째 이유는, 쌍용차 투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물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를 극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이 바로 쌍용차 정리해고일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누구를 구할 것인가? 노동자·민중의 삶인가? 아니면 배부른 자들의 이윤 플이인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이 투쟁을 지지하는 우리 모두는 전자를 위해, 즉 이 사회 진정한 정의를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초장부터 위기로 흔들거리는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의 투쟁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 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로 평가해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의 성과급이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비교육적인 일이 벌어진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문용린은 학교평가와 학교성과급을 통합하면서 일선 학교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학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특색사업의 개수를 늘리고 온갖 캠프와 대회를 남발한다. ‘보고서를 품 나게 작성하는 연구부장 만나면 높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려고 방과 후 학교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 추천서를 써 주지 않거나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학교들도 생기고 있다.

사실 교과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들은 구체적인 학교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학교 교육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평가의 결과로 학교 지원 예산이 달라지는 등 지역별 소외와 편차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학교의 전시성 행사 중심의 관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교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교성과급 도입은 학교의 비교육적 관행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줄 세우기

더욱이 일제고사 향상도를 학교 성과급과 학교 평가의 지표에 반영하면서 일제고사 성적 향상은 학교 현장의 사활적 과제가 돼버렸다.

지역 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학교 성과급의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교장과 교감의 승진을 위해, 학교 예산을 확대하려고 학교는 일제고사 성적 올리



경쟁과 소외로 아이들 가슴에 피멍 들게 한 초등 일제고사 5년 동안 투쟁해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한 데서 더 나아가 모든 일제고사를 없애야 한다.

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고, 그 결과 초등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폐지라는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줄 세우기’가 ‘학생 줄 세우기’로 이어지는 경쟁의 굴레 속에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초등 일제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에 교육부는 뒷집 지고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

학교성과급과 일제고사는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정책의 완결판이다. 따라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런 경쟁교육에 맞서 제도의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힘을 집중해 전국적인 정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에서 분회, 지회별로 성과급 균등 분배를 조직할 때면 종종 이런 말을 들곤 한다.

“성과급 싸움은 다 진 게임 아니야? 현장에서 균등분배마저도 흔들리는 게 현실인데, 이 제도를 폐기시킬 만한 힘이 어디 있겠어?”

확대되는 성과급 제도의 차등성이 학교 간, 교사들 간 경쟁과 분열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학교성과급 폐기 투쟁을 전국적이고, 중앙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다는 말에 동감 의사를 밝히는 비조합원 교사들도 꽤 있었다.

성과급이 정부 정책이고, 항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에 타격을 입히는 정도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교조 본부로 성과급을 집중 반납하는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이 뜨거운 만큼 비조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조수진 전교조 전국대의원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오고 있다. 우리는 이 정의롭지 못한 협박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며 교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현장선언’이 진행됐다. 대열 곳곳에서 진행된 서명은 2시간여 만에 조합원 1천1백53명이 동참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전·현직 지부장과 집행부들도 포함돼 있다.

‘현장선언’에 대한 이처럼 뜨거운 반응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선 조합원들의 커다란 분노와 투쟁 의지를 보여 준다.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 카드를 꺼낸

강성우과 박근혜 정권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더욱이 6월 1일 ‘현장선언’은 2월 대의원대회 이후 지속된 규약시정명령거부 운동의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장선언’은 전국대의원 9인이 공동발의해 진행된 3백40여 명의 서명을 계승한 것으로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결정해 운동을 확대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인 상황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설 힘이 결집된

합원까지 참여시키며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누적 반납 전술은 다수가 동참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물론 참여할 교사들이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면 반납 후 균등분배 없이 성과급이 폐기될 때까지 누적한다는 전술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는 옹계도 학교성과급의 전국적 반납을 조직해 교육부에 반납하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 추후 균등분배 해 차등 성과급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과급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일보 전진을 위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한편, 학교성과급 투쟁은 일제고사 폐지 투쟁과 연동돼야 더욱 효과적이다. 정부 스스로도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하면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자인한 만큼,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다.

경쟁교육의 아이콘인 일제고사를 완전 폐지하고 비교육적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투쟁들은 특권·경쟁교육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시침 2013에서 ● 비고초기로 본 교육 위기: 어떻게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 교육 ‘위기’의 시대, 다른 교육을 향한 투쟁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것이다.

교사대회 직후 전교조 본부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대국민 홍보전, ILO총회 개입, 촛불집회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의 연대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1일 교사대회에서 확인된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는 전교조 본부의 향후 투쟁계획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전교조 본부와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모으는 ‘현장선언’을 더욱 광범하게 조직하자.

회계조작, 마힌드라 먹튀 우려

쌍용차 공기업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자

최근, 쌍용차 정리하고 과정에서 진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피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등원 없다”고 고함 한 번 치고 나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러는 사이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도 커져가고 있다. 국정감사 요구 못매를 피해, 1조 원 투자 계획을 내놔던 마힌드라 사장 파완 고엔카는 유상증자(새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 방식으로 8백억 원만 투자했다. 그

리고 나서 다시 직접 투자는 어렵다고 회피하고 있다. “이후의 자금 조달은 쌍용차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 노력이 우선이다. 그게 안되면 대출을 검토”한다고 했다.(파완 고엔카 인터뷰, <매일경제>)

마힌드라는 상하이차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차도 처음에는 매년 3천억 원씩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 차례나 직접 투자 특별 협약까지 했지만, 협약은 “휴지조각”이 됐다.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과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이 마힌드라의 먹튀를 우려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바로 쌍용차 문제의 책임 당사자다. 정부는 쌍용차를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했고, 상하이차의 먹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이명박은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 하며 상하이차를 옹호했고, 급기야 법정관리 하에서 노동자 3천여 명을 하루아침에 잘라 버렸다. 점거파업을 파괴하려고 정부는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또다시 쌍용차를 마힌드라에 매각해 지금의 먹튀 우려를 낳았다.

일자리 보장

따라서 마땅히 정부가 쌍용차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공기업화로 연결돼야 한다. 공기업화해 해고자들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부당한 정리해고 과정을 폭로하기 위해 정부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안과 연결돼야 한다.

정부는 쌍용차 같은 기업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이런 압력 때문에 박근혜조차 대선 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

일각에서는 공기업화가 노동자 산업통제나 노동자 정부 수립과 결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하고 필요한 요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2차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대대적인 공기업화가 진행됐다. 그리고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다. 국가

는 자본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자본 축적과 노동자 착취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가장 적절한 대상이고, 공기업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사기업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이나 노동자의 삶이나. 이런 제기는 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고, 쌍용차 일자리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허수영

앞시침 2013에서 쌍용차,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박철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 대학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외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국토교통부는 3일 "KTX 노선의 민영화 계획 없다"며 거듭 사기를 쳤다. 수서발 KTX는 사기업이 아니라 연가금이 자본의 70퍼센트를 갖는 "공공"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자본을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경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연가금이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주인 없는" 자본이라는 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코레일의 자본 제한은 사기업 진출을 위한 발판이다.

정부는 철도 지주회사 방안이 "독일식 공공" 모델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눈속임을 위한 사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방안은 독일과 달리, 수서발 KTX 등 서울-지방을 잇는 주요 간선을 민영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국토부 내부 검토 문건도 간선 부문에서 "일부 노선을 개량"하겠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독일에선 시설과 운영 부문이 한 지주회사 아래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상·하 분리 체제를 더 확고히 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자선에 사기업들이 진출하고 대규모 인력감축 등 고통을 낳은 독일식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철도 '구조 개혁' 방안은 더 노골적으로 주요 사업 부문을 시장에 내맡긴 영국식 분할 민영화에 가깝다.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서발 KTX부터 손을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핵심 노선에 민영화의 길을 열어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2014년 물류 자회사 설립, 2015년 적자노선 민영화와 차량 정비 자회사 설립, 2017년 철도 지주회사 전환, 신설노선 민영화, 유지·보수 회사 설립 등 일련의 로드맵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철도 민영화 대수술은 요금



투지가 높아지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 열차를 멈추면 민영화 질주도 멈출 수 있다.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 등 끔찍한 재앙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될 신자유주의 교통전가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은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근 철도노조 지도부는 본격적인 투쟁을 재비하는 한편, '노사민정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민영화 추진에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칼을 빼든 이상, '사회적 대화'로 민영화를 저지할 수는 없다. 민주당 일부가 경쟁 체제 도입의 한 방식인 '제2공사회'에 적극 찬성한 데서 보여지듯, 이들은 정부의 품수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뒷걸음칠 수 있다. 노동자 구조조정과 시장화 조처를 확대 해 온 코레일 사측도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철도노조 지부장 22명이 "사급한 정 의 결 의와 찬반투표 조작"을 공개 호소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노조 지도부도 이를 수용해 6월 중 임시대의원대회와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곧 있을 철도산업위원회 의결만으로 곧장 수서발 KTX 민영화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따라서 서둘러 전면 파업에 시동을 거는 게 효과적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열차를 멈춰 세워 전국을 뒤흔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5월 25일 집회가 보여 줬듯, 기층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도 높아지고 있다. 용산개발 부도를 빌미로 한 1인 승무 확대와 인력감축·전환배치도 이런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단결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이미 전국과 서울 전역에서 지역대위들을 구축했다. 이제 이런 기층의 연대체를 적극 추동하고 연결해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

노동자 파업과 정치 투쟁의 결합이야말로 박근혜의 민영화 정책을 패퇴시킬 진정한 힘이다.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저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취약한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철도 사업 전체를 1백여 개로 조각내 사기업에 팔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권을 잃을까 걱정하던 일부 정부 관료들, 심지어 일부 보수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는 일관되지 않았고, 대저 정부하에서 약화된 노동운동은 민영화를 막아 내지 못했다.

결국 영국 철도는 1997년 4월에 완전히 분할 민영화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시설 유지·보수를 맡았던 사기업 레일트랙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조차 인색했다. 1997년 런던 사우스을 사고로 7명이 사망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눈이 먼 레일트랙은 이 사고 이후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뒤 런던 패딩턴역 근방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벌어져, 다시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기업들이 돈벌이 경쟁을 하는 체제에서는 최소한의 통합적 안전시스템도 불가능했다. 2001년에 레일트랙 대변인은 이렇게 시인했다. "선로 시설도 있고, 열차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열차 운행사들도 주주 배당을 위해 공공성을 내팽개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기업들은 고장 난 안전장치를 수리하지 않은 채로 운행을 감행하기 일쑤였다.

특히 영국의 철도 요금은 매년 치솟아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3년 현재 서울역에서 수원역 거리(리버풀-맨체스터)의 1인 이용료가 한국보다 5~6배나 비싼 4백80만 원이나 된다. 게다가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기느커나, 민영화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다.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헬세를 쏟아부은 탓이다.

영국 기관사 노조의 앤드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 철도의 경험 덕분에 '민영화와 자유 시장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끝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면,

말로 박근혜의 민영화 정책을 패퇴시킬 진정한 힘이다."

따라서 철도 공공성 확대를 바라는 이들은, 철도 민영화뿐 아니라 1인 승무 확대에도 반대하며 두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

김은영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선진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병원 점거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장호중·전지윤

5월 29일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이로써 홍준표는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로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며 폐업을 정당화한다.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금 누수"라는 것이 저들의 사고 방식이다. 환자를 한 명 한 명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노동조건이 저들에게는 파괴해야 할 "기득권"이다.

실제로, 홍준표는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일부 받아들이다, 오히려 더 거가 살아서 폐업을 밀어붙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다. 물론 이들은 그동안 감히 노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장하지 못했고 지금도 '유감' 운운하며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홍준표의 범죄를 묵인·방조해 왔다.

공공의료와 민주노조를 공격하려는 데서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



공공의료를 지키는 정의로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리병원 설립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철도·가스·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밀어붙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옹호하면서 홍준표와 박근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사들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홍준표가 병원 집기와 의료장비를 빼내 물리적으로 청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점거 농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홍준표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을 감히 끌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폐업 조레안의 도의회 통과도 계속 대가이 위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의 불쏘

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한 지방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홍준표의 폐업 선언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의 불쏘

13년째 열리는 대규모 맑스주의 포럼

맑스즘2013

7월 19일(금) - 22일(월) / 장소: 고려대학교 / 주최: 노동자연대다함께

참가신청 · 문의 : www.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 진실을 전할 수실 명의 국내외 연사들

★ 때문에까지 헌신하지 않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50여 개 주제들

★ 민주적이고 열린 토론

★ 참가신청한 패널 토론

★ 부활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집중 토론할 수 있는 철학의 기차

★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저항의 미래

★ 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생육차, 대안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자 연대

★ 1987년 이후의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 17노동자정당사태와 정치개혁

★ 종북 마녀사냥과 민주주의

★ 박근혜 정부의 발전적 정책: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범죄의 정치경제학

★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는 어떻게 보지를 공조하는가 ● 프롤레타리아트의 프롤레타리아트

★ 협동조합운동은 사회 변화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 슈퍼 갑 상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새로운 세대를 위한 레닌 기프트 ● 레닌 혁명적 전통 그리고 민주노동 ● 혁명적 전통과 변화의 전통

★ 오늘날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 성평등과 여성 차별 ● 이주: 우리를 분열시키는 신화를

★ 이집트 혁명: '사람의 불이' 이슬람주의의 가물로 이어지는가

★ 유로존 위기와 저항 그리고 좌파의 대안 ● 자본주의의 '간접적 사회주의': 평가의 전환

★ 올해 주제의 연사를 발표시 (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 참가 신청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 facebook.com/marxism.or.kr

★ @marxism11wt

아이기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끌어내리려는 압력이 항상 작용한다. 임금을 깎을수록 자본가들이 챙겨가는 몫인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자연스레 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이윤을 향한 이 탐욕은 최근의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거의 광란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이윤만 보장된다면 자본은 모든 법을 유린할 준비가 돼 있으며,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

자본가들은 흔히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노동자가 예나나 농노처럼 강제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주를 고를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가에게 고용돼 일한 후에 월말에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임금은 일한 양에 비례해서 지급받는 '노동의 대가'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결근하면 덜 받고, 잔업과 특근을 하면 더 많이 받는 식이다.

그래서 결만 보면 노동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

마르크스는 임금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마치 자본가는 돈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사고, 또 노동자들은 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노동을 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그들이 돈을 받



자본가들의 도둑질에 맞서는 임금인상 투쟁 2013년 5월 8일 최저임금 투쟁 결의대회.

고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이다."(칼 마르크스, 《임금노동과 자본》)

마르크스의 출발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도 다른 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사고팔린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생계를 꾸리려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에게 고용돼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노동력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동자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바로 임금이다.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지, 또는 임금 형태가 시간급인지 성과급인지 등은 관계없다. 노동의

성격과 무관하게, 노동자는 모두 임금을 받고서 노동력을 판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새롭게 충전(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즉, 노동자가 입고,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다시 일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임금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화폐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 측면에서 노동력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다르다. 노동력은 가치를 창조한다. 즉,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은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마르크스가 '잉여 가치'라고 부른 그 차이는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모든 이윤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을 일할 때 5시간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만

나머지 5시간은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

이처럼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 전체가 아니며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뿐 아니라 정면 충돌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의 이윤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기본급, 성과급, 직무급, 상여금 등의 복잡한 체계들은 이런 실체를 가리곤 한다.

결국 임금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문제는 결국 투쟁하는 쌍방의 세력 관계 문제로 귀결된다."(칼 마르크스, 《임금, 가격, 이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쟁취한다면,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한 결과다.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더 작아진다. 우리 주위의 현실을 한번 둘러보지만 해도

이 점은 명백하다.

노조가 있는 작업장과 없는 작업장, 단결과 투쟁의 전통이 있는 작업장과 없는 작업장을 비교해 보라.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단결된 힘으로만 임금과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

물론 임금 인상 투쟁이 임금제도, 즉 노동자들에게서 이윤을 뽑아내는 착취제도를 철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투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직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오랫동안 일하는 노동자가 정치와 사상, 조직 등을 고민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임금 인상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단결과 연대 의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제도 자체를 철폐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깨닫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박성환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독점 구조' 때문에 우리 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OECD 국

가 중 가장 비싸다고 주장한다.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LNG를 수입한다고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석유산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전담하던 석유산업에 1960년대 말부터 재벌들을 하나둘씩 참여시켰고,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은 유공을 SK(당시 선경그룹)에 넘겨 버렸다.

이제 석유산업은 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현대중공업그룹), S-Oil(한진그룹)이 과점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재벌들은 치솟는 석유 가격 덕분에 높은 수익을 거뒀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매우 커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조차 '알뜰주유소'를 만들며 석유 가격을 낮추라고 재벌들을 압박했지만, 석유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스산업도 재벌들이 나눠 먹으면 석유산업과 비슷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민영화되면 가정용 가스 요금이 갑절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스 민영화에 맞서는 가스 노조와 진보진영의 대응도 시작했다.

1인 시위와 3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에 이어, 6월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스공사 노조 조합원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가스 노조 이종훈 지부장은 6월 10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6월 하순에는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

라고 선언했다. 에너지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파업은 매우 정당하며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물론 이 파업은 가스 민영화 법안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아서는 파업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엄매이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파업이 민영화에 맞서고 있는 철도 노조의 투쟁과 결합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강동훈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이호성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민자 발전의 확대와 판매 부문

민영화에 애쓰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력 민영화 사례를 보면, 그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8년 이후 자유화로 전력회사 8곳이 지배하던 지역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4개의 대형 전력회사로 개편됐다. 더 큰 독과점화가 진행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력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전기 산업의 시장 집중화는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독과점화하면서 대기업들의 시장 조작과 담합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 도입으로 전력회사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폭적인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한 것이다.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은 전기요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자본가들의 몫이 됐다.

민영화로 발전 설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도 흔들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2000년 여름 이후 심각한 전력난

이 발생했고 전력회사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은 무려 3배까지 급상승했다. 이러한 사태는 발전회사 등이 의도적으로 설비를 줄이고 시장을 조작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부도 직전의 전기회사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주정부가 송전 시스템을 직접 소유 관리하는 공기업화가 추진됐다.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전력 산업 민영화는 효율성을 상승시키기는커녕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만 야기했다. 즉, 안정적 전기 공급과 공공성

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민자 발전을 확대하고, 전력 수급 위기를 틈타 자본에게 수요 관리 사업을 허용하는 등 전력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2002년 발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바 있고, 2008년 노동자·민중이 들어 올린 촛불의 힘으로 그들의 계획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

우리 모두의 것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에서 살바 싸움하는 열강들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한 시리아 '평화'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열강들의 시리아 개입이 왜 위험한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설명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전쟁으로 피 흘리는 시리아를 두고 세계 열강들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움직여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S-300 대공 미사일을 아사드 정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자유시리아군(FSA)*은 공군이 없으므로, 러시아의 움직임은 서방이나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열강들도 시리아 혁명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심층팔구 사태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다.

레바논 시아파 이슬람주의 운동인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 군대의 침략을 막아 내며 전 세계 반제국주의 진영의 환호를 받은 바 있다.

헤즈볼라는 현재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사드 정권이 북부 도시 쿠사이르를 탈환할 때 헤즈볼라 전사들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한다.

이 불행한 마을 쿠사이르는 전략적 요충지인 홈스 겐에 있다. 홈스 겐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서부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고, 북서부 해안 지역은 정권의 기반인 알라위파의 심장부다.

쿠사이르 전투에서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아사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전략·정보 웹사이트 <스트랫포>는 이렇게 보도했다.

“외부의 도움으로 시리아 정부는 국민방위군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민병대를 창설해 자유시리아군한테 입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아사드 정권은 새 민병대를 빠르게 훈련하고 배치할 수 있었다. 친정부 진영에 국민방위군은 믿을 만한 병력이다. 그뿐 아니라, 기존 군대가 까다로운 공격 작전을 수행할 여유도 생겼다.”

헤즈볼라와 아사드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정부와 오랫동안 동맹 관계였



사진 출처 | Lens of young Hakkim

2년 넘게 혁명을 지켜낸 시리아 민중 시리아 혁명은 아사드 정권뿐 아니라 열강들의 간섭에도 맞서 싸우고 있다.

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맞서 투쟁하며 레바논 민중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시리아 내전에 더 깊이 개입하겠다는 재앙적 결정을 내렸다.

종파 갈등

아사드 정권은 민중 봉기를 다수파인 수니파 무슬림 대(對) 소수파인 알라위파·시아파·기독교 연합의 종파·종단 간 내전으로 바꾸려고 필사적이다. 아사드가 성공할수록, 이 전쟁이 레바논으로 번져, 1970년대와 1980년대 레바논을 찢어 놓은 피비린내 나는 종파 갈등이 재점화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갈등이 확산돼도 아사드는 잃을 것이 없다. 5월 30일 아사드는 골란 고원에서 “저항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 골란 고원은 시리아 영토지만 19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곳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S-300 대공 미사일을 가동하는 것을 막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런 사태 전개는 아랍 혁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방 제국주의한테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민중 반란과 반혁명적 반동의 투쟁이라는 일국적 측면이고, 둘째는 세계 열강과 지역 열강 사이에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국제적 측면이다.

몇몇 좌파는 시리아 혁명을 오로지 지정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려 한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이 이스라엘에 맞선 투쟁에서 “진보적” 구실을 한다고 과장하며 아사드를 지지한다.

이런 주장은 오류다. 왜냐하면 시리아 혁명이 일어난 사회적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리아 혁명은 아사드의 독재에 반대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아사드가 집권 후 부추긴 폭력 자본주의에 반대해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측면이 시리아 혁명을 뒤덮을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는 중동 내 주요 동맹[시리아]

자유시리아군
아사드 정권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혁명 세력.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

을 돕기로 결심한 듯하지만, 양측은 서로 살바 싸움을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러시아 미사일이 시리아에 도착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유럽연합이 금수 조치를 폐기한 것은 아사드에 대한 외교적 압력(군사적 압력이 아니라)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슬람권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미국은 시리아 반군의 최대 무기 공급체인 카타르를 제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부 열강들이 시리아에서 벌이려는 대리전은 종파 간 충돌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56호 / 번역 최병현

레바논 파병 한국군도 당장 돌아와라

제국주의 열강들이 시리아 개입을 확대하며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 처지도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서울과 동두천 사이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골란 고원 주변에서는 시리아 혁명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서만 시리아를 세 차례나 폭격했다. 이 지역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폭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6일 오스트리아는 골란 고원에 파병한 3백80명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병사들을 향한 위협이 통제되지 않고 압박해서 더는 감당할 수 없다.”(오스트리아 총리)

3백42명을 파병한 필리핀도 5월에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국 병사가 두 번이나 전투에 휘말려 억류되고 최근에는 부상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삼칠

게다가 레바논 집권 세력 헤즈볼라는 시리아에 더 깊이 개입해 아사드 정권을 더 확실히 돕겠다고 공언했다. 레바논도 시리아 내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동명부대가 레바논에 있을 명분도 없다. 실상 동명부대는 아랍 민중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차단하려고 파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를 만나 ‘글로벌 동맹’ 운운하며 협력적으로 시리아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명부대는 삼칠 그만하고 즉각 철군해야 한다.

김종환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백은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명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모두 2백45명이다.

여기에는 전두환의 장남이자 출판사 ‘시공사’ 대표인 전재국을 비롯해,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화그룹, SK그룹, 대우그룹의 전·현직 사장들이 포함돼 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진 등 국내 대기업

24곳이 조세도피처에 총 1백25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와 페이퍼컴퍼니는 단지 부자들의 부를 몰래 숨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부자들과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탈세를 하고, 부를 세습하며, 비자금을 형성하는 도구다.

이렇게 형성한 비자금의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다.

경제 위기하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 간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특정 산업이나 업종의 개별 이익을 보호받고자 특별 입법이 늘어나고, 정부의 인·허가나 특혜를 받아내려는 로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비자금의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인들은 권력이 총구뿐 아니라 금맥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자들과 고위 정치인들은 공범관계로 얹혀 있다.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자산을 비밀리에 축적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일가들에게 흔한 일이 됐다. 이명박이 연루된 BBK 본사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2003년 SK그룹, 2008년 삼성그룹, 2009년 효성그룹, 2011년 한화그룹 등 해외 비자금 조성에 대한 조사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내 30대 재벌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설립하는 국외법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재원 1백35조 원을 확보해 복지공약을 이행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는커녕 지하경제 양성화가 ‘무분별한’ 세무조사 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안해하는 부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반면에 한 달에 70~80만 원을 받는 재택 위탁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는 3.3퍼센트의 사업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려 한다. 심지어 재택 위탁 집배원의 임금은 13년 동안 시급 8백50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에게는 세금과 공제금 등을 언제든 빼갈 수 있는 ‘유리지갑’을 갖게 한다. 정작 자본가들에게 비자금을 숨겼는지 빼냈는지 표도 안 나는 두툼한 ‘방탄지갑’을 갖게 하면서 말이다.



서평 | 《후쿠시마 이후의 삶》

핵발전과 핵폭탄은 삼쌍둥이



《후쿠시마 이후의 삶》
한홍구 외 지음, 이령경 옮김, 반비,
266쪽, 15,000원

최근 비리 북마전 속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핵발전소(이 책은 ‘원자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정확한 뜻으로 ‘핵’이라 하겠다) 가동이 무더기로 중단됐다.

불량 부품으로 밝혀진 제어케이블은 사고 발생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핵심 부품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핵발전소 여섯 곳에서 이 불량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다. 정말 아찔하기 짝이 없다.

이 위험천만한 핵발전소가 꼭 필요한 것일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극적으로 던진 이 질문에 답하려고 세 명의 학자(한홍구, 서경식, 다카하시 데쓰야)가 좌담을 했다. 이 책은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각각 역사, 예술, 철학을 전공한 세 학자는 핵발전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핵폭탄, 민주주의, 동아시아 현대사 등의 주제를 결합시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세 저자는 ‘핵 마피아’라는 소수 집단의 이익 때문에 광범한 일반 대중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 관료, 재계, 학계 그리고 미디어”의 유착과 상호 의존을 통해 핵발전(더 나아가 핵무기까지)을 옹호하고 확대한 것이다.

특히, 국가의 구실이 중요하다. 이 책은 국가가 중립이라거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마피아’의 일부라는 것을 폭로한다.

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핵발전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기도 하다.

이것은 밀양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나, 핵발전소 관련 비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핵 마피아’들은 왜 핵발전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일본에서 핵발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상징적인 정치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핵발전소 필요 없다. 아베 신조 필요 없다” 6월 2일 6만 명이 모인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국회 포위 시위.

그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교였는데, 히로시마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히로시마의 핵폭탄 구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핵의 시대라고 생각했다.”

그 핵폭탄 구름 아래 피폭 당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험을 할 때, 나카소네는 끔찍하게도 핵폭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나카소네는 핵발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핵 마피아

나카소네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는 핵발전소가 핵무기를 만들 잠재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 기를 만들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큰 영

향을 미쳤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라는 명목으로 핵 기술을 수출했다. 우방 일본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커지길 바란 것이다.

이렇듯, 핵발전과 핵폭탄은 그 탄생부터 삼쌍둥이처럼 한몸뚱이로 태어났다.

미국은 자신의 우방들에게 핵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포함해 각국 지배계급의 핵무장 야욕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사고 후 중단된 핵발전소 대부분을 다시 가동하려고 하고, 현재 핵발전소 23기가 있는 한국도 5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미국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터키 등에 핵발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패권 경쟁에 정신이 팔려 전 지구를 핵으로 뒤덮으려고 한다.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풍력에너지는 안전할 뿐 아니라 핵발전보다 단가도 싸다. 화력발전이나 핵발전보다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한다.

불량 부품 때문에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재 상황은 어처구니가 없다.

핵발전소 가동을 영원히 중단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자들은 핵발전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를 돌아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 이집게도 이 책이 우리에게 일관된 대안을 내놓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찾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김무석

끊이지 않는 노동재해

노동자의 피와 팔다리를 잘라먹으며 자라는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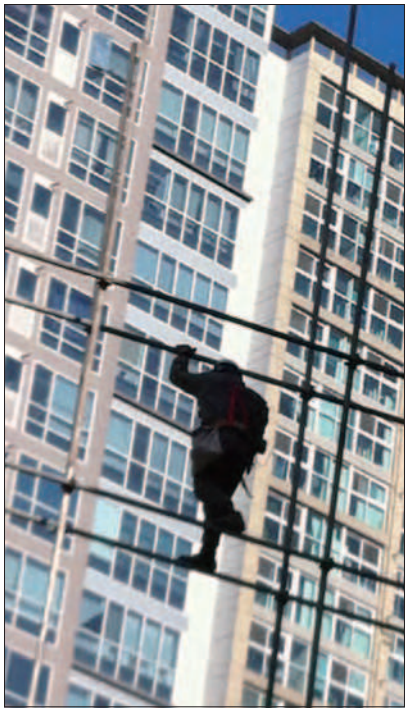
전용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의원

나는 1988년에 수은증기에 중독돼 이가 삭아 빠지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열다섯 살 송면이가 마석 모란공원묘원에 눕혀질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또,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장질환과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컨베이어에 머리가 깔려 들어간 해태제과의 여성 노동자, 화학물질에 접은 몸뚱이로 살아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수만 볼트에 감전돼 팔다리가 잘린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을 봐 왔다. 점차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머칠을 잡 못 자며 육중환 건설 장비를 운송하던 트레일러 노동자가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한겨번에 여러 생명줄이 끊기는 일들은 알고 보니 사장들의 이윤을 위해 서였다.

혼잡한 길거리에서 일어난 작은 접촉 사고를 회사에 알렸더니 수화기 저편에서



노동재해로 죽는 노동자가 한 해 2천5백 명
이민적 체제가 낳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돌아오는 답은 “차 많이 망가졌냐?”였다.

“다치지 않았냐? 많이 놀랐겠구나!” 하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동료들과 함께 트럭 19대의 운행을 이틀간 거부한 일도 있다.

1990년대에 뇌가 녹아내려 죽어 간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처럼 한스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이윤의 흡혈기는 2000년대 반도체 산업으로 옮겨 와서 박지연 씨와 황유미 씨를 죽였고, 이것도 모자라 더 많은 죽음을 부르고 있다.

일회용

구미공단에서 새어 나온 불산가스 때문에 소나무가 별걸게 단풍처럼 물들고 콩잎사귀는 만지면 부서지는 화석이 됐다. 적어도 앞으로 3년간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켰다. 여전히 우리는 이처럼 슬픈 현실의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다.

자그마한 도시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어린 시절에 ‘공장 다니는 친구’라고 내가 늘 부러워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손톱깎기 공장을 다니다가 프레스에 손

가락이 잘렸는데 보상금으로 7천 원을 받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윤 축적을 위한 ‘일회용 반창고’인 셈이었다.

자본주의 이윤 축적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기계의 인전이 우선이다.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평온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은 언제나 관심 밖의 일이다.

이윤 축적을 위한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등골을 먼저 뺏아먹는 자가 번쩍이는 자가용을 굴리는 사장이 되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로 금강휴게소 맞은편 기슭에는 개발 독재 시절 변변한 건설 장비도 없이 ‘인해전술’로 만들던 경부고속도로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가 77명이라고 쓰인 비문이 있다. 물론 이 수치가 거짓 말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처럼 참혹한 세월의 질곡을 딛고서야 198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용광로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끓는 쇠물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영국에서는 한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자 해당 기업주가 과실치사로 구속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노동자 40명

이 허파가 시커멓게 타 죽게 내버려 둔 냉동 창고 기업에 고작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됐다. 한 사람당 50만 원씩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 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통계로 한 해에 2천5백 명이 노동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10만여 명이 다친다. 이 법안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노동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치리게라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순간에도 병원 노동자가 환자를 돌보다가 바늘에 찔리고 메스에 베이면서 병원균에 감염되고 있다.

평생을 칠판에 글을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육 노동자가 밤마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성대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일생을 건설현장에서 망치질을 해 온 노동자가 날이 갈수록 팔을 마음대로 못 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이윤체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깨닫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류자 17만 4천여 명 중 65 퍼센트가 5년 미만 미등록 체류자다. 취업 비자가 없이는 제3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중 상당수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고 짐작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자유를 가로막는다. 기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학대(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까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견디다 못해 미등록 체류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 범죄를 양성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등 다문화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헛소리로 합동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경찰조차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범죄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강도, 살인, 강간 같은 강력 범죄 비율도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는 광범한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체류 증가와 이주민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주민 범죄 위협을 과장하는 정부야말로 인종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하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틀렸다. 정부는 경제 위기인 지금도 이주노동자를 해마다 수만 명씩 들여온다. 계층화된 노동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 투입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은 합동단속을 벌이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하지만 합동단속 자체가 가장 악랄한 인권 침해다.

‘걸어다니는 4대악’ 윤창중과 조세호피처에 재산을 은닉한 자들이야말로 “범죄를 양성”하는 자들이다. 또한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야말로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는 정부야말로 “다문화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정부는 야만스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임준형·이정원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친구다 이주노동자 괴롭히는 박근혜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4월 28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불허됐고, 적지 않은 수는 절망해 난민 신청을 철회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3퍼센트로 전 세계 평균인 30퍼센트의 절반도 안 된다.(유엔난민기구)

난민에게 강제송환은 끔찍한 일이다. 자신을 박해할 것이 뻔한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모두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

1994~2011년 법무부가 단번에 난민을 인정한 경우는 1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의 제기와 행정 소송은 필수 코스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2008년)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

은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됐다. 그조차 운이 좋아 인권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은 경우다. 47퍼센트는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조차 못했다. 제대로 된 통역도 없었다.

공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난민이 된 용비 토나 씨도 이런 어려움을 뚫고 간신히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는 올해 출간한 《내 이름은 용비》에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고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피를 말렸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토나 씨는 그나마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심사 절차만 까다로운 게 아니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난민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고작 몇 달짜리 취업 허가를 내준다. 심사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난민들은 단속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들을 ‘불법 취업’ 명목으로 잡아들여 추방한다. 어렵잡아 2천 명이 이런 위험한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을 마냥 환영하기 힘들다. 또한 난민들의 시름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1~2년 사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었었는데,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신청이 더 늘까 봐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더더욱 죄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법무부는 버마 소수민족 출신 난민을 “불법 취업”을 이유로 추방을 명령했다. 그는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다른 버마 출신 난민 두 명도 외국인 수용소에 3개월째 갇혀 있다. 그들은 외국인수용소에 갇혀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면 바로 추방된다. 외부 출입도 못하고 공중전화 말고는 쓸 수 있는 통신 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난민법에 이전 현실을 조금 개선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난민 신청 자체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거나, 난민 신청자를 한데 모아 격리하는 시설을 둔다거나, 난민 지원에 인색하다는 문제 등 핵심 문제는 여전하다. 면접 등의 절차 없이도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간이 절차’를 도입하는 등 더 나빠진 측면도 있다.

이주민 중에서도 난민은 처지가 더 취약하다.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박해당할 수 있어서다. 난민을 잡아 가두고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난민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정원

▶ 이주 : 우리를 분열시키는 신화들

소책자 이주노동자 자원활동가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막시즘
MARXISM 2013

▶ 더 많은 정보는 9면에.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복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복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수가 급격히 늘자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짐짝 취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3국에 수용소를 지어 수용하

려 했고,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 취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한국 입국 심사 기간을 늘리는 등 입국 요건을 강화했다.

한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처지가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가뜰이나 엄청난 실업률과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탈북민 지원금도 대폭 줄이고 정착금 지원 기간이나 대상도 축소했다.

이런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 남과 북 모두에 한별을 품는 탈북민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들이 계속 생겨나겠는가.

한국 정부와 우익들이 탈북민들의 처

지는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면서 ‘인권’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는 ‘북한인권법’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북한 압박용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하거나 인색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반공·반북 뉴라이트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해 사회적 정점을 돌리고 우파를 결집하려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은 ‘일부 내

용을 수정한다면 북한인권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이를 추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오바마도 중국 견제용으로 이 쟁점을 꺼낼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인권을 운운하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말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불과 1백26명밖에 안 된다. 미국은 고통에 처한 탈북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핵 선제 공격 위협과 연습까지 하면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우습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광범한 주민들이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만 명이 탈출한다는 사실은 북한 체제의 문제를 드러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점에서 좌파는 탈북민 문제를 미국과 남한의 냉전 우익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부풀린 거짓으로 치부하며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북한 압박용일 뿐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탈북민의 자유 왕래, 난민 권리 인정, 한국 정착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쟁취는 오로지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야 한다.

이현주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6월 19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고등학교 강제 방과 후 학습 반대

조직된 행동으로 학교의 양보를 받아 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0교시, 방과 후 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예전부터 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방과 후 학습을 실시했다. 올해 학기 초에는 석차 하위 50퍼센트로 강제 방과 후 학습 대상을 늘렸고 불참시 불이익도 더 커졌다.

그러자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강제 방과 후 학습 대신 선택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해 이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서명을 받던 도중 학교 당국에 발각됐다. 학교 당국은 내게 부당하게 별점을 부여하고 교장은 폭언을 했다. 그 후 나와 다른 학생들은 자신감이 떨어졌고, 강제 방과 후 학습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움츠러들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힘을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5월, 학교 당국은 강제 방과 후 학습 대상을 일제고사 해당 학년 전체로 다시 늘렸다.

그러자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많은 학생들이 강제 방과 후 학습을 불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행동은 강제 방과 후 학습에 참가한 학생 일부의 지지도 얻었다. 그러자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강제 방과 후 학습에 불참했다.

거부 투쟁

학교 당국은 방과 후 학습에 불참한 학생들은 “결과 처리하고, 별점을 부과한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한번 오른 학생들의 사기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학교가 별점을 부과하거나 결과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항의하면 철회시킬 수 있다”며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학교 당국의 협박에도 학생들이 거부 투쟁을 이어나가자 이번엔 학교 당국은 설득을 시도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궤변을 일삼았고, 설득은커녕 오히려 많은 학생들의 반감만 샀다.

이 과정에서 토론모임도 한몫했다. 토론모임에서 토론하면서 우리는 ‘강제 방과 후 학습은 불법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반대한다’ 등의 생각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 학교 당국과의 논쟁에서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투쟁을 이어 온 지 3주째 되는 날, 학교는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방과 후 학습은 하고 싶은 학생만 한다. 그러나 학력미달 학생(하위 50퍼센트)들은 무조건 방과 후 학습에 참가해야 한다” 하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조직된 행동이 학교가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것이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 아직도 하위 50퍼센트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강제적으로 방과 후 학습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최창해 고등학생



일제고사 폐지와 '미친 교육' 반대를 요구하며 싸우는 청소년들.

서울시립대

또다시 투쟁에 나선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

서울시립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70세 정년연장과 직접고용, 인력 확충, 현장소장 교체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5월 28일 총회 이후 모든 조합원들이 빨간 투쟁 조끼를 입고 근무를 시작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과 많은 학생들의 연대에 힘입어 폭언과 해고 위협 등을 일삼던 관리자를 쫓아내고 직접고용을 쟁취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정년을 65세로 줄여 버린 것이다. 이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약 40퍼센트인 24명이 2015년에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학교를 떠나면 당장 먹고 살기도 막막해질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65세 ‘정년 퇴직’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은 6월 3일에 ‘정시 출퇴근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어마어마한 업무량 때문에 정해진 출근 시간인 7시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을 시작하고 퇴근도 늦춰야 했다. 이 때문에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실태는 더욱 심

각하다. 현재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겨우 17명인데 44개의 건물을 관리한다. 그것도 모자라 용역업체는 이제 여름이니 에어컨 필터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시설 보수에 필요한 자재도 지급이 안 돼 그냥 방치된 곳도 있다.

JS씨밀레(용역업체)의 현장소장은 이런 실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만 하다. 한 노동자의 말에 따르면 한번은 기계 경보가 울려서 보고했더니, 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보기를 꺼버렸다고 한다. 이러다가 주요 시설이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아찔하다.

JS씨밀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부당 노동 행위를 벌이며 탄압하기도 했다. 용역 계약이 끝나는 7월 말까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겠다는 심보다.

그래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가 즉각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은 “서울시 정책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현수막을 게시한 지 20분 만에 무단 철거해 버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퇴거 명

령을 내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으며 임금 삭감 협박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면담을 했지만 서울시도 “사업장 마다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서울시 핑계만 대며 회피하던 학교 당국한테 변명거리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학교의 청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안정되고, 적정한 업무량으로 일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이 노동자들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태가 용인된다면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와 침해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학내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단 사흘 만에 학생 1천 2백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비정규직 차별과 설움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서울시립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오동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서울시립대 모임

울산 택배 노동자

파업에서 이긴 후 노동조합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전국을 뒤흔들었다. 울산에서도 약 70명이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화물연대에도 가입했다.

파업 이후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6월 1일 ‘CJ대한통운 파업 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파업의 주역인 CJ대한통운 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등 연대 단체 활동가들이 모였다.

최요나 CJ대한통운 파업 투쟁 울산비대위 부위원장은 파업을 돌아보며 성과를 말했다.

“처음에 저는 하나의 빗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빗물이 모여 시냇물

을 이루고 이제는 바다가 됐습니다.”

정말 그랬다. 노동자들은 “이제는 회사가 우리 눈치를 본다. 우리가 못쳐서 싸웠다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노동자들은 비대위를 노동조합 준비위로 전환하고 준비위원을 선출했다. 파업의 성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이날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등 울산지역 택배 노동자 8백 명을 단일 대으로 조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파업의 성과로 노동자들의 조직도 강화되는 것을 확인한 뜻 깊은 날이었다.

김지태



6월 1일 ‘CJ대한통운 파업 투쟁 보고대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수감 중인 이종화 씨가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7번 방에서 읽는 <레프트21>은 늘 희망이고 위로”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감옥에서의 소회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함께 싣는다.

제주 강장에서 사랑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위해 7년 넘게 노력하신 분들과 평화의 일꾼들이 미사와 1백 배를 통해 소통과 공존의 길을 말하고 있다.

그 1백 배가 침탈당하고, 천주교 미사 도중에 연행돼 [소년 미결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제주교도소] 7번 방의 생활은 감정이 복반친다. 거리를 방황하다 이곳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가정] 상황을 듣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는 것은 또 다른 고문이다.

선거 후에 벌어질 일들이 걱정돼 선거 전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힘들며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온 현장으로 들어갈 결심으로 이곳 제주 강정으로 내려왔다.

그 후 매일매일 들려오는 비보와 강정의 상황은 여기저기 피 흘리는 상처보다 더 깊은 절망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 불씨를 살려 내는 것을 소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한다.

나는 땅과 어우러져 농사짓고, 그 소중한 마음을 풀어내는 글 쓰는 일이 정말 좋다.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일길 가리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연다.

세상 모든 일이 농사이므로.

평화지킴이 이종화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자며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던 박근혜는 건설을 강행하려고 온갖 폭력적 수단을 마다 않고 있다. 기지 건설 반대 천막 철거를 막으려고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목에 사슬까지 걸었지만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었다. 지금도 정부는 주민·활동가 들을 연행·구속하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평화활동을 하던 이종화 씨도 4월 28일에 연행되고, 30일에 구속돼 현재까지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작가이자 시인으로서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천연자원을 지키고자 했다. 더불어 4·3 항쟁의 고통이 서린 제주도에 다시는 전쟁

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가해 왔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이 문제를 다룬 칼럼을 싣고, CNN조차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낼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연대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종화 씨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활동가 이종화 씨를 석방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김재원

이종화 씨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제주도 제주 우체국 사서함 161호 이종화(1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port@left21.com

국민대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

“취업률을 잣대로 한 학과 구조조정 반대한다”

6월 3일 '2014학년도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가 열렸다. 학생 40~50여 명이 공청회 자리를 가득 메워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당국은 주최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끝끝내 공청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의 빈자리를 남겨 둔 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대 당국은 4월 17일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법과대학 등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신입생 정원을 줄이고 '자동차IT융합학과',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수송기디자인학과' 등 기업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학칙개정안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5월 16일 제단 이사회에서 통과돼 현재 총장 공포만 남아 있다. 이에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모임이 공문을 보내 학과 구조개편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학교 측에 공청회를 열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거절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공청회를 연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부실'대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이하 '부실'대 대책위)와 제25대 법과대학 학생회 '골든타임'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나는 발표(발표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에서 취업률을 잣대로 한 구조조정이 학문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실제 취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취업을 지표만 높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학과 구조개편안이 중앙대, 배재대, 동국대처럼 학과 통폐합 같은 더 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에 맞선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대학이 단지 취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학문 탐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진 학생회장은 학교 당국이 올해 초 법무학과를 폐과시키려다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철회된 사례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잘 준비돼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꼼수

연극영화과 이영옥 씨는 학교 당국이 예대 신입생 수를 18명 줄였으며 예술계열을 취업률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영옥 씨는 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탈출하려면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과 전임교원을 늘리는 등의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방청석 질의와 토론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정의과, 법과대학, 사회학과, 국제학부, 국어국문학과 등 다양한 소속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하며 더 큰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우리는 공청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학교 당국이 이사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짓된 보고에 근거해 학과 구조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이 알려진 만큼, 이사회의 지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학과 구조개편안에 비판적인 대학 평의원들과도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아혜 국민대 '부실'대 대책위 연락 간사

원광대

총장실 점거 투쟁이 보여 준 가능성

6월 4일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폐과 철회 등 학생총회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학생 40여 명이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이 학생총회가 성사된 지 두 달이 넘도록 학생총회요구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무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은 총장실 점거를 막으려 했지만 학생들은 결국 점거에 성공했다. 우리는 총회요구안을 담은 팻말과 현수막을 벽에 붙이며 총장실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총장실이 “해방구”가 됐으며 단결된 힘으로 총장실 점거에 성공한 것을 매우 기뻐했다.

당일 6시 대학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 학생 1백여 명이 모일 만큼 학생들의 지지도 컸다.

결국 농성 이틀째 학교 당국은 총장·교직원과의 면담을 열고, 총회요구안을 협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학교 당국의 태도 변화를 두고 점거 농성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점거농성자들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원광대모임 회원

들은 점거 농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날 집회에 1백여 명이 모일 만큼 학생들의 지지가 큰 상황에서 농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면 학교 당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은 투쟁이 고립될 것이라며 점거 농성을 풀자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은 투쟁 동력이 없다고 했지만, 지레 비판적인 생각에 빠져 점거를 정리하자는 총학생회장의 태도야말로 투쟁하려는 학생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결국 학생 6명이 점거 농성 지속을 지지했지만 11명이 반대해 아쉽게도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이번 점거 농성은 학생들의 강력한 행동이 있을 때에만 학교 당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학교 당국은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폐과 철회와 같은 주요 요구안은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학교 당국은 학생총회요구안을 수용하라!

박영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원광대 모임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6월 19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트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노동자는 하나여야 한다

나는 우파 언론들이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11년째 일하는데 시급이 겨우 7천2백36원이다. 기본급은 1백69만 원 정도다. 기본급 비중이 4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심야노동에 몸이 망가지고 주말 특근에 가족들과 설여유도 없다.

상여금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게 마땅하다. 즉, 기본급이 대폭 늘어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주변 동료들은 기본급이 늘면, 주말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됐지만, 기존 임금을 받으려면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사실상 주6일 근무를 하게 생겼다. 우리도 주5일만 일하고 주말에는 제대로 쉬고 싶다.

자본가들은 기본급을 낮게 유지해 노동자들을 싼 가격에 장시간 노동에 매어 두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량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키기도 쉽다.

또, 위기가 닥쳐 물량이 줄어들면 성과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조영아 기자

잔업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는 '귀족 노동자'?

도 쉬어진다.

통상임금과 임금 체계 개선은 주간연속2교대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노동계급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니 만큼 사업장 별로 따로 대응하지 말고, 계급적 연대와 단결로 투쟁해야 한다.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대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미조직 비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다.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활용해 통상임금 지급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며 투쟁해야 하고, 전체 노동계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치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갈탈하겠다면 우리에게 정면 도전하는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김승현 기아차 노동자

박정희 기념공원에 돈 버리지 말고 복지에 써라

서울시 중구청이 박정희 기념공원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 예산 3백억 원 중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보편화, 내면화를 위해 이처럼 대규모의 세금을 동원해 거대한 역사(役事)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조선왕조를 수령으로 몰아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떠올리게까지 한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이 80억 원이나 넘게 모자란 상황에서 추잡한 독재자의 이름을 딴 공원을 지으려고 수백억 원을 세금에서 뜯어내겠다는 역겨운 발상이다.

이는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 공약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물론, 최근 발표한 '공약 가계부'의 기조와도 완전히 상반되는 극악한 처사다.

'공약 가계부'에는 박근혜가 “증세 없이 기존에 낭비되던 지출을 줄이면 상당한 재정이 마련된다”고 이야기해 온 것이 반영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1백35조 원

을 확충하는 주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세출 절감'(84조 원)인 것이다. 이는 부자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면서 동시에 경제 위기 시기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세출 절감'의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는 것들이다.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정과제 재투자'(이것도 창조경제인가?)를 통한 40조 원 절감, 조삼모사식으로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될 '이차 보전 전환', 민영화 시도와 겹쳐 보이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같은 것들이 '세출 절감'의 진정한 본질을 이룬다.

따라서 박근혜의 '세출 절감' 구호가 설득력과 진정성을 지니려면 '공약 가계부' 발표를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서울 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되는 이데올로기 사업부터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야 말로 진정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 재투자'인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공원을 굳이 짓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단! 박근혜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 지어라.

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코너에 몰린 박근혜는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6억 원은 현재 가치로 정확히 3백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박정희 기념공원을 짓는답시고 투자할 예산과 똑같은 액수다.

만약 박근혜가 자신의 '6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히 공원을 짓고 싶다면, 자신의 사재에서 3백억 원을 털어 공원을 짓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압살당한 수많은 민중의 혼을 기리는 추모 공원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김소망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남부지구
세계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연사 : 이장구(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6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L&B부동산경제연구소 강의장(교대역 13번 출구 200m 농부의 아들 2층)
참가비 : 일반 4,000원 (학생 3,000원)
문의 : 010-9401-1370

서울 서부지구
사회악화 시대, 협동조합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 6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공간 여성과 일” 지하교육장 (한국여성노동자회(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뒤편)
참가비 : 3,000원(학생·청소년 2,000원)
문의 : 010-7725-9823(문자도 환영)

산골

터키로 번진 ‘아랍의 봄’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의 활동가 **룬 마겔레스**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을 쓴다. 터키에선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폭력적으로 진압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총리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사과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4대 노총 중 두 곳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로 운동에 가세하는 등 운동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

6월 1일, 5일간의 시위 끝에 경찰이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중심가 탁심 광장에서 물러났다. 11년간 집권한 현 정부가 처음으로 겪은 커다란 패배다. 경찰이 철수하자 탁심 광장은 축제의 장이 됐고 수만 명이 공원과 광장을 점거했다. 분노가 폭발하며 거대한 시위가 터져 나오자 터키 정부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 규모에 시위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게지 공원과 인근 탁심 광장을 재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동안 좀처럼 커지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그 공원은 공사장처럼 보였다.

5월 말, 공원의 나무를 베는 것에 반대해 연좌농성을 벌인 시위대 수십 명을 경찰이 야만적으로 공격하자 사태가 급변했다. 경찰 폭력 소식이 퍼졌고 시위는 나무를 지키는 것에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으로 바뀌었다. 시위가 이스탄불뿐 아니라 이즈미르, 터키 수도 앙카라 등 여러 도시로 퍼져나갔다. 경찰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시위대를 공격했고, 사람들은 경찰의 쉴 새 없는



용기 있고 활화산 같은 투쟁으로 우리를 고무하고 있는 터키 민중.

최루탄 세례에 맞섰다.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시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냄비와 술을 두드리고, 호루라기를 불고, 총리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점 주인 등이 나와 경찰한테 맞은 사람들을 보살폈다. 시위대가 숨을 장소와 음식을 마련해 줬고, 최루가스가 가시도록 레몬즙을 줬다. 마침내 사람들이 탁심 광장에서 경찰을 물리쳤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정부의 온갖 신자유주의 정책에 환멸을 느끼며 조용히 부글대고 있었다. 쇼핑센터가 빠르게 느는 것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한 것과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특하면 압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다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터키 정부는 대중의 분노와 결의를 과소평가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당인 정의개발당의 지지자들 역시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직접 참가한다. 어쩌면 정의개발당* 정부의 종말이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운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해야 한다. 제한을 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위대 중에는 터키 국기로 몸을 감싼 채 경찰과 싸우는 작은 집단 [군부를 지지하는 터키 민족주의 집단]이 있다. 이들은 무슬림이나 쿠르드족 등 평범한 사람들을 운동에서 배제시키려 들 수 있어 위험하다. 그러나 다른 모습도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은 애초 공공부문 개악에 맞서 잡아 놓은 6월 초 파업을 이 운동에 연대하는 행동으로 바꿨다. 이것이야말로 운동이 전진할 방법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56호 / 번역 김중환

전 세계로 번지는 연대 물결

민주노총은 6월 5일 터키 공공부문노총과 진보노동조합총연맹의 반정부 파업과 시위에 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터키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6월 2일 5백 명 이상이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가에 모여 터키 항의 운동에 연대를 표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터키 총리 에르도안의 퇴진을 요구했고, 언론한테는 터키 정부가 벌이는 탄압을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수천 명이 터키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터키, 그리스, 연대

하라”고 외쳤다. 이 구호는 최근 두 나라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적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둘러싸고 터키와 그리스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갈등해 왔다.]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졌다.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 안타르시아와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RS)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 활동을 벌였다. 터키 내에서는 2백 군데 이상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라 콕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56호 / 번역 정다운

정의개발당
총리 에르도안이 이끄는 집권당으로 신자유주의적 이슬람주의 성격이 있다. 현재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군부와 터키 민족주의 세력
80년 지배 끝에 정의개발당에 권력 일부를 내줘야 했다.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시위를 이용하려 한다.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전선이다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이번 시위가 야당이 배후에 있는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 시위라고 폄하한다. 시위를 편드는 척하는 서방 언론은 시위가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양쪽이 같은 주장을 하는 셈인데, 모두 진실이 아니다. 1923년 터키 건국 이래 80년 동안 지배계급은 세속주의를 내세워 평범한 사람들을 억눌렀다.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데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또한 터키 민족주의를 내세워 쿠르드족(터키인 5명 중 1명)과 아르메니아인 등을 탄압·학살하기도 했다. 사실상 온 국민을 억누른 것이다. 군부는 ‘건국이념을 수호’한다며 독재적 권한을 휘둘렀다. 그런데 1990년대 말 터키의 대자본

가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면서(터키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중동에 걸쳐 있다), 군부를 정치 무대의 뒤로 물러서게 했다. 쿠르드족을 전면 탄압하는 대신 그들과 부분적으로 타협해 실리를 챙기려고도 했다. 그 덕분에 2002년에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집권할 수 있었다. 정의개발당은 지배계급의 새 염원을 따라 신자유주의를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담배, 발전소, 국영은행까지 닥치는 대로 민영화해서 해마다 팔아 치운 자산 규모가 이전 정부의 16곱절에 달했다. 그래서 서방 언론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이슬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며 칭송했다. 아랍 나라들이 배워야 할 본보기라는 거였다.

그러나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터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이 채 안 되는데, 세계 5백대 갑부가 한국보다 더 많다(포춘). 도심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상류층을 위한 쇼핑몰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번 투쟁의 발단이 된 게지 공원에도 호화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쇼핑몰 한편, 이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든 군부는 신자유주의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호들갑만 떨었다. 반면에 정의개발당은 군부에 맞선 ‘개혁’ 이미지를 유지하며 지지율이 꾸준히 올랐다. 오늘날 에르도안의 거만한 태도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정의개발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기층 민중의 고통과 불만은 계속 쌓여 왔다. 지금 터키 전역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도 없이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저항운동이 벌어진 것은 그 분노가 폭발했음을 보여 준다. 흔한 보도와 달리 정부의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터키 민족주의와 군부에 반대해 정의개발당을 확고히 지지한 세력 일부도 저항에 참가했다. 터키인과 쿠르드인, 무슬림과 무신론자,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경찰 폭력에 맞서고 있다. 게지 공원에서는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쉽게 볼 수 있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는 의식도 열린다. 이슬람 예배당인 모스크는 부상자들을 치료하려고 임시 병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 이슬람 학자는 “저들은 신앙 없는 이들만 탁심 공원에 모인 것처럼 말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뒤늦게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 야당도 반정부 시위에 합류했다. 그중 상당수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길 바라며 무슬림과 쿠르드족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운동에 올라타지 못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과, 군부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터키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이 이를 파업으로 반정부 시위에 연대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중환